

민주주의를 희생하는 안보는 가짜다

글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wooksik@gmail.com

평화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후퇴는 이명박 정부가 낳고 있는 이 시대의 ‘쌍생아’일까?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냉전 시대로 뒷걸음쳐왔고, 급기야 2010년 말에는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전쟁 위기까지 겪었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군사 모험주의도 분명 큰 책임이 있지만 흡수통일론이 파리를 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비껴갈 수 없다.

한국식 소프트파워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일컬어저온 민주주의 역시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표현과 양심과 집회·결사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는 지적은 이제 식상하기까지 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들이 악순환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에 있다. 남북관계 악화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사회 문제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탄압하는 반민주적 통치 근거로 악용되고 있고,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의 건설적이고도 생산적인 토론 문화 형성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회가 이념적으로 자유롭지 못할 때, 냉전 반공주의가 여전히 지배적인 정치 언어로 기능하고 있을 때, 민주주의는 그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합의 형성의 기제가 되기는커녕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그 사회

의 기득 구조와 특권 체제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기체에 머무르게 된다”는 최장집 교수의 진단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천안함 침몰과 민주주의의 위기

한반도 위기가 ‘정권 안보’로 악용될 수 있다는 그래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2010년 천안함 침몰 및 연평도 사태를 거치면서 거듭 확인할 수 있다. 3월 26일 밤에 발생한 천안함 침몰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초기에는 비교적 신중한 입장이었다. 사건 발생 지점이 북방한계선(NLL)에서 12km 떨어진 백령도 서남쪽 1.8km 부근이고 사건을 전후해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없었다는 점에서 ‘북한 연계설’은 낫다는 것이 초기 군당국과 정부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정부의 신중론에 강력한 비난이 일었고 이에 따라 정부도 북한 소행으로 심증을 굳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5월 20일 민군 합동조사단(합조단)은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5월 24일 고강도의 대북강경책을 천명했는데 여기에는 사실상의 대북 지원 전면 중단과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무력시위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자신의 어뢰 공격

으로 결론지은 것은 ‘날조극’이라며 천안함 침몰 원인을 자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검열단’ 수용을 요구하면서 강력한 군사적 보복을 위협했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빠지면서 안보 위기는 6.2 지방선거를 삼켜버릴 듯 했다. 4대강을 비롯한 각종 선거 이슈는 남북한 당국의 날선 공방전에 파묻혔고 언론 보도도 안보 위기를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하는데 맞춰졌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이명박 정부가 상당 부분 의도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하고 초강경 대북 조치 발표를 통해 안보 정국을 조성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복풍’을 일으켜보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였기 때문이다.

냉전과 남북대결이 첨예했던 1980년대에 민주화를 쟁취할 수 있었던 힘이 한국 시민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평화와 민주주의의 선순환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원동력도 ‘깨어 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에 있다.

실제로 정부는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를 서둘렀고 그 만큼 부실했다. 합조단이 결정적 증거라고 말한 어뢰 추진체를 인양한 시점은 5월 15일이었는데, 물리적으로 불과 나흘 만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거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합조단은 '과학' 이 아니라 '심증' 으로 움직였고 결국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했다. '선거용' 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던 조사 일정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6.2 선거를 앞둔 북풍 물이는 역풍을 맞았고 한나라당은 참패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보수진영과 이명박 정부의 안보 정국을 이용한 민주주의 탄압은 오히려 더 기승을 부렸다. 합조단의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한 이

견 표명을 '친북·이적 행위' 로 몰아갔던 보수 진영은 급기야 대표적인 권력 감시 단체인 참여연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정부, 여당과 보수 언론 및 단체들은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천안함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한 것을 두고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 라고 몰아붙였다.

보수 진영이 격양된 반응을 보인 1차적인 이유는 6월 15일 남북한 사이의 '천안함 외교전' 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정부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표하고 유엔 안보리에 신중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데에 따른 당혹감이 반영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부실한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와 굴절된 민주주의관 및 국가안보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연대가 서한을 통해 제기한 의혹과 문제점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제기한 것의 '연속선상' 에 있었다. 그만큼 정부가 조사 결과에 대한 초당적·국민적 수궁과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또한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을 '이적행위' 로 몰아간 것은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관 역시 과거 독재정권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건강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지 '이적행위' 로 비난받을 행위가 절대 아니었다.

보수 진영은 참여연대를 공격하는 논리로 '외교와 안보에 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는 주장을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응은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외교안보사를 보면 초당적 합의 못지않게 정파적 대결도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다.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해 미국 내부의 자정 기능과 비판 정신이 무너졌을 때의 재앙은 2003년 부시의 이라크 침공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 미국의 외교안보사를 보면 초당적 합의 못지않게 정파적 대결도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다.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해 미국 내부의 자정 기능과 비판 정신이 무너졌을 때의 재앙은 2003년 부시의 이라크 침공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시민단체들이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감시·견제하기 위해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활발한 로비 활동을 벌여온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의 보복전쟁으로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몰두할 때, 9·11 테러와 아무런 관계가 없던 이라크를 침공할 때에도 국제사회에서 반전 시위와 로비를 주도한 단체들은 미국 NGO였다. 그렇지만 '전쟁광' 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부시 행정부조차도 이들 단체를 '애국심이 부족하다' 거나 '어느 나라 국민이냐' 는 식으로 매도하지는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보수 진영의 참여연대 마녀사냥은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만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정부, 언론, 보수단체의 맹폭에도 불구하고 파문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에 2천명 이상이 신규로 회원가입을 하는 등 참여연대 회원수는 급증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신변상의 위협과 법적인 처벌 위협을 받을 정도로 고초를 겪으면서도 자부심을 갖고 정진할 수 있는 데에는 이처럼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 에 힘입은 바가 크다. 보수파의 비이성적인 마녀사냥이 오히려 참여연대의 존재가치와 영향력을 키워준 셈이다.

연평도 사태와 민주주의의 위기

평화와 민주주의의 악순환적 위기는 2010년 말 연평도 피격과 전쟁 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이며 반평화적이라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지만 포격 원인을 분석하는 시각이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기도 했고 이는 민주주의의 장점이기도 하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전쟁불사론'이 맹위를 떨쳤고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응을 비판하면서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에는 '친북·이적 행위'라는 딱지를 붙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12월 남한의 연평도 사격 훈련 강행을 거치면서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은 두 가지 맥락에서 분석할 수 있다.

하나의 안보 위기 자체가 다른 사회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다는 점이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과 이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은 4대강 사업, 정부의 민간인 사찰 및 대포폰 논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 국회 날치기 통과 등 국내의 중대 현안들을 빨아들였다. 안보 문제의 일반적인 속성과 함께 분단과 전쟁과 냉전의 유산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한국적 특수성이 반영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정권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이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연평도 포격 직후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북한의 도발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정부 비판을 친북 행위와 동일시하는 언행을 보여준 것은 이러한 속성을 잘 보여주었다. 특히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예상치 못했다고 하더라도 남한이 국내의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연평도 포사격 훈련을 강행한 데에는 국내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조성된 안보 위기를 틈타 국회 날치기 통과를 강행했고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던 시점에 연평도 사격 훈련을 강행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특히 남북관계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보수 진영은 '외교와 안보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민주국가에서 성립할 수 없는 파시즘적 사고이다. 오히려 외교안보정책 실패시 가장 큰 피

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라는 점에서 '주권재민'의 정신이 가장 잘 실현되어야 할 분야가 바로 외교안보이다.

특히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대응이 북한의 반발과 맞물려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안보상의 중대 위기'에 시민사회가 더욱 큰 관심과 우려를 표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한 외교안보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를 만끽한(!) 당사자는 바로 보수 진영이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화해협력정책을 '피주기론'으로 매도하

면서 10년 내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발목을 잡았고 마치 한미동맹이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안보 불안감을 조장하려고 했다. 자신의 표현의 자유는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고 개혁·진보 진영의 표현의 자유는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자의적인 이중잣대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인식론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진보든 보수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안보를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표현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고 이것이 공론의 장에서 여과·검증될 때 그래서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때 국민통합은 달성될 수 있고 국가안보도 튼튼해질 수 있다.

냉전과 남북대결이 첨예했던 1980년대에 민주화를 쟁취할 수 있었던 힘이 한국 시민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평화와 민주주의의 선순환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원동력도 '깨어 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에 있다. 안보를 위해 민주주의가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보를 위해 민주주의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안보를 위해 민주주의가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보를 위해 민주주의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